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들

일부 동포 무국적에 여권도 못 챙겨 한국 입국 못하고 '발만 동동' 광주 지역사회 돕기 운동에 31명은 30일·4월 1일 첫 단체 입국

“저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전쟁으로 인해 피난 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동포 31명이 집단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고려인동포들은 여전히 귀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으로 인해 급하게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일부 고려인 동포는 고국으로 귀국을 하고 싶어도 무국적이거나 국적이 있더라도 여권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동포 31명이 고려인마을의 지원을 받아 오는 30일 오후 5시와 4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번 귀국은 지난 13일 최마르크(13세) 군과 단신으로 탈출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남이 나따(13세)양에 이어 세 번째로, 단체귀국으로는 처음이다.

고려인동포 31명이 전쟁의 참화를 피해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와 헝가리, 폴란드로 탈출했으나 항공비가 없어 애를 태운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지역사회와 마을주민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고려인마을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금 1300여 만원과 항공권 후원으로 30여 명이 오는 30일(영유아와 어린이 8명, 여성 탈출자 13명)과 4월1일(어린이 6명, 여성과 노약자 4

명) 단체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탈출 루마니아에 도착한 고려인동포 김류사(70세)씨는 갑자기 탈출하느라 가방 하나와 신분증만 가지고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그동안 태어나 자라온 고향 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여권은 만들 생각조차 못했다.

광주고려인마을에는 김씨의 국내 귀환을 간절히 원하는 아들 리제니스(40)씨는 어머니의 안전한 탈출소식에 한숨을 돌렸지만 입국비조차 받지 못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는 소식에 “연료한 어머니의 난민촌 생활을 생각하면 하루 하루가 피를 말린다”고 말한다.

김씨는 1980년대 후반 우크라이나 리콜라에브에서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와 농사를 지으며 동포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며 같이 지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뿐 아니라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 인근의 타국으로 몸을 피신한 동포들이 귀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여권 등이 없어 고려인마을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 동포뿐 아니라 전국의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무국적자뿐만 아니라 여권을 챙기지 못한 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접수되고 있다는 게 고려인마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김류사 씨의 집과 재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황으로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오느라 여권을 어떻게 손에 쥘 수 있었겠느냐”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동포들의 귀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80년 비상계엄 해제 촉구 故 조태일 시인 42년만에 무죄

유신체제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곡성 출신 故 조태일(1941-1999년) 시인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태일 시인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행위의 시기, 동기, 내용을 볼 때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원심이 적용한 계엄 포고 제1호는 전두환 등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자 발령한 것이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인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전동 음식점에서 열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고 결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일 시인은 곡성 태안사에서 대처승의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광주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고 시집 ‘식칼론’, ‘국토’, ‘꽃잎은 꺾이지 않는다’, ‘혼자 타고오르고 있었네’ 등을 펴냈다. 1969년 ‘시인’지를 창간해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1989년부터 광주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1999년 9월 7일 간암으로 작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항 통해 무단 밀입국 베트남 노동자 구속 송치

새벽시간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 목포항을 통해 무단 밀입국한 30대 베트남 노동자가 붙잡혔다.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화물선을 타고 목포항 대북부두로 들어와 밀입국한 베트남인 A(38)씨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파나마 선적 화물선 선원인 베트남 국적 A씨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지난 19일 보안 취약 시간대인 새벽 4시30분께 목포항 대북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벽에 선박에서 몰래 나온 후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철조망을 넘어 항구를 빠져나간 뒤, 영암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 안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검거반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9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임시 숙소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별 즐기는 대학 캠퍼스

휴일인 27일 오후,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을 찾은 가족과 연인들이 잔디밭 주변에 앉아 봄날씨를 즐기며 한가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일빌딩245·18기념공간 개관 2주년 맞아 만족도 조사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일빌딩245’ 5·18 기념공간 개관 2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에서 제공하는 전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 형태 등을 조사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8일까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0년 5월 개관한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9·10층)은 헬기 추락 흔적을 원형 보존한 공간으로 1980년 당시 금남로 일대와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제작한 축소 모형, 헬기 사격 증언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설문조사에 참여한 관람객은 5·18 기록관 캐릭터인 메이팍 굿즈(블펜, 떡메모지)를 받을 수 있다.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은 헬기 사격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다”며 “이번 개관 2주년 기념 만족도 조사를 통해 5·18기념공간이 더욱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말 많고 탈 많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될까

국토부 기준 강화안 마련...아파트 사용승인 전 바닥소음 차단 성능 검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간에 강력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바닥소음 기준 강화안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65.5%에 이르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활동이 늘어나면서 광주·전남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

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 예정)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dB에서 57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실제 층간소음 원인(어린이가 뛰는 등)을 고려해 변경된다.

기존의 층간소음 측정용 타이어(7.3kg)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는 ‘뽀뽀’ 방식으로 단일화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량충격음 측정용 그대로 뽀뽀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용 배구공 크기의 공(2.5kg)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고무공) 방식으로 바뀌 어린이의 뛰는 소리를 측정하게 된다. 바닥 소음 완충재의 성능 기준도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시공 이후 입주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가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